

與 “주변국 대응 살펴야” 野 “장병 안전문제”… 모두 신중론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구

전쟁 상황·다국적군 참여 가능성 정치권, 사실상 파병 요구로 판단 해외 파병, 헌법상 국회 동의 원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하면서, 여야 모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선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우리 정치권에선 사실상 ‘파병’ 요구로 보고 있는 셈이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주변국 대응 등을 보면서 보수적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중동의 복잡한 정치 상황, 특히 이란과의 관계, 한미 동맹, 우리 상선의 안전, 그러면서도 우리 파병부대 군함의 안전 등을 다 검토해야 해서, 적극적으로 파병에 동의하는 것은 반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선불리 동참했다가는 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미국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규탄 및 파병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단히 위험하다”면서 “물밑에서 한미 간에 협의를 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이어 “시간을 끌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가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김 의원은 “청해부대의 임무가 소말리아에 있는 아덴만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임무를 확대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맞다”면서 “우리 교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디나 갈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으나 이번에는 전쟁상황이고 또 다국적군에 편

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맞지 않나 생각하고, 국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군함 파견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기현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파병 요청 반대’ 1인시위에 돌입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지목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병을 요구했다”며 “우리 군을 파병하는 것은 우

리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적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행동에 참여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이란의 직접적인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 기업과 재외 동포, 영사 시설의 안전을 포기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역시 신중한 입장이다. 송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투 개입 가능성 큰 지역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필수적인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동의를 받아 청해부대 파견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의 공식 요청이 오면 1단계로 현재 아덴만에서 활동중인 청해부대를

파견하고 2단계로 추가적인 한미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의원은 “그 과정은 국회 동의 등 투명한 절차를 거쳐, 우리 국민과 우리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 결정이어야 한다”며 “특히 이란 못지 않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비전투 목적으로, ‘자국 선박 보호’라는 명분으로 파견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에 따르면 해외 파병 시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1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한 바 있는데, 이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파병 동의안에 포함된 ‘유사시 작전 범위 확대’ 조항을 근거로 작전 범위를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는 데 추가 동의를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므로, 국회 동의를 필요하다는 게 군 관계자 및 정치권의 관측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과도한 선명성 경쟁, 검찰 개혁 망칠수도”

이 대통령, 당내 강경파 겨냥 발언 “개혁의 본질은 실질적 성과”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개혁을 두고 여당 내에서 갈등이 이는데 대해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면서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당 일각에서 보완수사권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설득에 나선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국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 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

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공소청장’ 명칭 문제나 검사 전원 면직 후 재임용 등을 언급하며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 중이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논의되는 것은 검찰개혁 ‘정부안’에 아니라 당정이 협의하고 여당당론으로 채택됐다며 “이 수정안은 정부안 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고 정정했다. 이어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

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보완수사 허용 여부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돼 있다면서 “이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예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5일 경남 창원시 반송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

李,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가능성 언급

저소득 노인에게 증액분 지급 방식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노인빈곤의 해결책 중 하나로 기초연금 개편을 언급했다. 대통령이 먼저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아,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의 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현재까지의 체계를 건들지 않으면서도, 이후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증액을 하자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 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월 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돼 온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후신으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법’에 근거해 시행됐다.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65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된다.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상 연 수입 5600만원이 넘는 노인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의 20%를 감액했던 제도를 취약계층부터 우선 개선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부부가 해로(偕老)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은 별개 기금이 조성돼 있지 않고, 국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 현찰을 지급하고 있다. /서예진 기자

국힘 공관위,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김지사 “민주주의 원칙 파괴” 반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충북 지역 경선에서 현역인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공천 배제)하기로 했다. 후보는 추가 모집을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영환 충북지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커질 전망이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 많은

논의 끝에 현 충북도지사를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공천 접수를 받아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김 지사의 업적을 부정하거나 평가절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 사람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변화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할 것은 안정에 머무는 정치가 아니라 스스로를 바꾸고 흐르는 혁신의 정치”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같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에 대해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복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관위의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관위는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파괴했다”며 “충북도민의 의사를 헌신짝처럼 가져다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고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정해 놓고 면접을 진행하더니 기가 막힌다”고도 비난했다.

김 지사는 이번 컷오프 과정 등을 면밀히 살핀 뒤 재심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